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4. 6. 30. Vol. 26

■ 농정이슈

원유 과잉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요인 발생, 가격 동결 합의

■ 정책브리핑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절차 간소화

■ 연구지원

2014년산 보리(빨보리, 곶보리, 맥주보리, 밀),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금주의 핫 이슈

〈원유 과잉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요인 발생, 가격 동결 결정〉

- **[원유가격연동제 2013년 도입]** 낙농가유가공업계 2~3년에 한 번씩 협상 통해 원유가격 인상폭 결정했지만, 지난해부터 원유가격연동제 도입·적용
 - **(도입배경)** 원유 가격 높이려는 낙농가와 낮춰 받으려는 유가공업계 간 대립* 반복되자 정부가 통계청이 매년 발표(6.1일)하는 전년도 우유생산비 인상분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해 원유가격 산출하여 원유 가격 조정
 - ※ (낙농계) 우유생산비 최대한 높게 책정 ↔ (유가공업계) 우유생산비 최대한 낮게 산출
- **[원유가격연동제 부작용 발생, 원유 공급↑, 수요↓]**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원유 공급량 증가*하는데도 유제품 가격 상승 → 소비부진 → 원유 공급 과잉이라는 악순환 갈수록 가중, 수급 불균형 초래
 - ※ 남아도는 원유로 만든 분유 재고가 11년 만에 최대치
- **[2014년 원유가격 1당 25원 인상 요인 발생]**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올해 우유와 유제품의 원재료 되는 원유 기본가격 1당 25원 인상*, 8월부터 적용 예정인 **원유 가격 965.11원**(2013년 1당 834원 → 940원, 13%↑) 산출
 - ※ (농식품부) 원유가격 25원 오르면 우유 소비자가격은 35원 정도 인상 전망
- **[낙농가-유가공업계, 원유가격 인상 놓고 대립*]** 원유가격 인상 여부 놓고 낙농가 유가공업계 간 이견 차로 대립(협상 지속)했지만 끝장회의(6.25일)에서 양측 **원유가격 동결 합의(2015.7월 말까지)**,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정(6.27일)**
 - ※ 낙농가, 가격 동결 요건 되는 가격 변동폭을 전년도 가격의 2% 이내 제시한 상태
 - **(낙농가 - 원유가격 인상)** 생산비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요공급 예측 힘들어 약속대로 공식에 따른(25원, 전년도 가격의 2.7%) 원유가격 인상 주장
 - ※ 원유는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특수성 큰 데다, 어린 젖소가 젖을 공급하기까지 최소 2년은 소요
 - **(유가공업계 - 원유가격 동결)** 인상분 크지 않아 가격 반영 어렵고, 원가부담 증가, 원유 공급 과잉, 소비둔화로 가격 동결 주장
 - ※ 따뜻한 날씨 탓에 원유 생산량 크게 증가, 수요·공급의 원리 무시하고 공식에 따른 기계적 원유가격 도출은 불합리
 - **(원유가격연동제 개선 공감대 형성)** 원유가격 누적연동제* 도입, 시장 수급상황 고려해 생산비 변동액 10% 협상 범위 설정, 한 번에 원유가격 인상폭 클 전망
 - ※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산출한 원유 기본가격 증감분이 전년 원유가격 4% 넘지 않으면 가격 동결, 다음해 누적된 인상분 합산해 원유 가격 책정하는 방식

자료 : 경향신문·국민일보·연합뉴스(2014.6.16.) / KBS·YTN·연합뉴스·한국경제TV(2014.6.22.) / KBS·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한국농어민신문·헤럴드경제(2014.6.23.) / 서울파이낸스·이투데이·조선일보(2014.6.24.) / 머니투데이·아시아투데이(2014.6.25.) / news1(2014.6.26.) / KBS·세계일보·연합뉴스(2014.6.27.) / 경향신문·아시아투데이·이투데이(2014.6.28.)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 결과(6.20일)

-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 6.20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국민 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 개최
※ 농업인단체·전문가 등 약 300명 참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후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정부-쌀 관세화 공식화) 쌀 시장 개방 불가피성 강조, 최대한 고율관세 책정, 피해 최소화 위해 농가소득 안정 장치 및 쌀 부정유통방지대책 조속히 마련
- (전국민회총연맹-쌀 관세화 반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현상유지, 의무면제 등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협상’ 하는 것이 중요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관세화 하되 쌀경쟁력 강화 대책마련) MMA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관세화 유예 고려하기 보다는 관세화 하되 쌀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및 FTA/TPP 협상에서 쌀 양허 제외한다는 대국민 약속 필요
- (전문가) TRQ 증량 부담 감안할 때 관세화 선택, 고율관세 산정 및 쌀 산업 정책 마련 위한 노력이 최선의 대책

자료 : KBS·YTN·내일신문(2014.6.20.) / 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한국경제·한국일보(2014.6.21.) / 내일신문·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농촌여성신문·news1·뉴스토마토·매일경제·머니투데이·문화일보·한국경제·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2014.6.23.) / 아주경제·중앙일보(2014.6.24.) / 농축유통신문·한국농업신문(2014.6.27.)

참고 :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2014.6.20.) 결과」(2014.6.23.)

<농식품부, 농업단체와 쌀 관세화 관련 논의>

-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 단체와 쌀관세화 여부 결정 등 주요현안 대응방안 논의, 6.25일] 농업인 단체 초청, 쌀관세화 등 주요 당면 농정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응방안 논의
- (농업단체 의견 적극 검토) 쌀관세화 여부 등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해 소통과 농업계 역량결집이 중요, 농정 현안 대응 시 농업 단체의 의견 적극 검토

자료 : NEWSis·아주경제·연합뉴스·이데일리(2014.6.26.)

참고 : 농식품부 동정_「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 단체와 쌀관세화 여부 결정 등 주요현안 대응방안 논의」(2014.6.25.)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협상 개최

-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협상 개최, 6.30~7.4일] 서울에서 개최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김명준 서비스투자과장 수석대표 외 정부 대표단 참석
※ (터키) 경제부 야피치(Yapici) EU국장 수석대표 외 정부 대표단 참석
- (주요내용) 서비스투자 협정문 관련 잔여쟁점 논의, 서비스 양허 및 투자 유보 협상 최대한 진전시켜 실질적 타결 기반 마련

자료 : 뉴스와이어·news1·NEWSis·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2014.6.28.)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제7차 협상 개최 - 2014. 6. 30. ~ 7. 4. 서울 -」(2014.6.27.)

<비관세장벽 협의회 3차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3차회의’ 개최, 6.26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조치 대응방안 논의
※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해 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② 무역규범 합치여부 면밀히 분석, 이를 토대로 정부·민간 통상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논의하는 場으로 활용 중
- (필요한 사례 선별 작업)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비관세장벽 DB(tradenavi.or.kr) 사례 중심으로 대응 필요한 사례 선별 작업
※ (업종별 협회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비관세조치가 업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전문가자문단) 무역규범 위반여부 수차례 회의 통해 검토
- (구체적 애로 사항, 효율적 대응방안 토의) 선별한 사례에 대하여 SPS(위생검역), 정부조달, 수출통제 등 조치 유형별로 분류
- [향후계획] 비관세장벽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부가 대응할 관리과제 및 대응조치 확정

자료 : 뉴스와이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파이낸셜뉴스(2014.6.27.)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업계와 정부, 머리 맞대고 비관세장벽 대응 논의 - 「비관세장벽 협의회 제3차 회의」 개최 -」(2014.6.26.)

G20 회원국, 무역제한 조치 소폭 감소

-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1차 보고서」** 발표] 세계무역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사무국, 무역 및 투자조치에 관한 제11차 보호주의조치 관련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기간: 2013.11월 중순-2014.5월 중순)

☞ 농정이슈

- ※ 미국·EU·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한국·인도네시아·멕시코·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호주·터키
 - ※※ G20 정상간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각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 목적으로 연 2회 발간
 - **[무역원활화조치(관세감축, 보호주의조치 철폐)] 93건**, 직전 조사기간(2013.5월 중순~11월 중순) 57건에 비해 크게 증가, 전 세계 상품 수입의 0.4%, G20 회원국 수입의 0.6% 차지
 - **[무역제한조치(보호무역 조치)] 112건**, 직전 대상기간(2013.5월 중순~11월 중순) 116건에 비해 다소 감소, 전 세계 상품 수입의 0.2%, G20 회원국 수입의 0.3% 차지
 - **(반덤핑조치, 58% 차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무역제한 조치는 반덤핑조치
 - ※ 수입 제한조치 25건, 수출 제한조치 17건
 - **[투자관련조치]** G20 회원국 중 15개국 투자 관련 조치 취했으며, 상당수는 국제 투자 제한 철폐하고 투명성 높이는 조치, 일부 투자 제한 및 원활화가 혼합된 형태
 - **[권고사항]** 다자무역체제는 보호주의에 대한 최상의 방어 수단이자, 성장과 지속 가능한 회복 및 발전의 중요한 동력임을 강조, G20 회원국들이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리더십 보여줄 것을 촉구
- 자료 : news1-뉴스토마토·NEWSis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 (2014.6.26.)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G20 국가의 무역 제한 조치 소폭 감소 - 세계무역기구/경제협력 개발기구/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의 무역 및 투자조치에 관한 제11차 보호주의조치 관련 모니터링 보고서 발표 -」 (2014.6.26.)

☐ EU, 태국 민주정부 출범 전까지 동반자 협정·FTA 협상 전면 중단

- **[유럽연합(EU), 태국에 외교적 제재]**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6.23일)에서 **쿠데타 이후 민정이양이 이뤄지지 않는 태국**에 외교적 제재 결정
 - ※ 태국 군부는 쿠데타가 발생(5.22일)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민정 이양 계획은 나오지 않고, 국민 화해와 개혁 과정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에 총선 실시, 대략적인 민정 이양 일정만 밝힌 상태
 - **(EU 각료회의 성명 발표)** “태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EU와 태국 간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심화하는 모든 협정 체결 논의 중단”
 - **(주요내용)** 양 지역 간 **모든 공식방문 중단**, 현재 논의 중인 **동반자협정 및 협력협정 체결 연기**하는 방안 합의, 상황 악화되면 추가 제재 경고
 - ※ 이 외에도 공정한 선거 통해 민주주의 의회 구성, 정치범 석방과 검열 폐지 촉구
- 자료 : KBS(2014.6.23.) / NEWSis서울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조선일보(2014.6.24.)

☞ 농정이슈

☐ 대북 산림녹화 지원 사업 재개 움직임

- **[통일부, 민간단체 ‘겨레의 숲’ * 4명 방북 승인, 6.25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실무접촉(6.26일) 가져 4년 동안 중단됐던 대북 산림녹화 지원 사업*** 재개될 움직임
 - ※ (추진사업) 2007년부터 북한 평양 등 6개 지역에서 양묘장 조성, 평양과 금강산 등지에서 부분적인 조림 사업 진행 등 대북 산림녹화 사업 진행했지만 2010년 5·24조치로 산림녹화 사업 중단
 - ※※ 북한 산림 공동 개발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14.3월)에 포함된 내용
 - **(논의내용)** 산림 병충해 방지, 시범조림, 양묘장 지원 등 4년간 중단됐던 산림 분야의 협력문제 폭넓게 논의
- 자료 : KBS·YTN(2014.6.25.) / 경향신문·국민일보·뉴스Y·NEWSis서울신문·세계일보·아시아경제·아주경제·연합뉴스한겨레·헤럴드경제(2014.6.26.)
- 참고 : 통일부 브리핑_「겨레의 숲 이운식 사무처장 방북 승인 관련 내용 등 브리핑」 (2014.6.25.)

☐ 살충제, 생태계 파괴로 식량 안보 위협

- **[살충제로 인한 생태계 오염이 식량 안보 위협]** 전 세계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 여전히 사용해 생태계 파괴 심각, 신경 독성분이 포함된 살충제는 해마다 수십억 달러 판매, 이로 인한 생태계 오염이 식량 안보를 크게 위협한다는 연구 내용 발표***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 6.24일)
 - ※ 니코틴 계열의 신경 자극성 살충제, '80년대 개발돼 기존에 사용하던 살충제보다 독성이 덜해 지금까지도 애용, 해마다 세계 각지에서 26억 달러(2조6,400억 원) 거래
 - ※※ 영국 데이브 골슨 서섹스대 교수를 비롯한 29개국 연구진, 환경저널 ‘환경 과학과 오염연구(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 **(살충제 사용 결과)** 해충을 박멸했음지는 몰라도 **곡물 생산이 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고**, 오히려 **꿀벌*·지렁이** 같은 곤충이 **생존에 위협 받아 식량 안보에 영향**
 - ※ 꿀벌의 경우 살충제로 인해 비행능력이 떨어져 자연수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면역체계에도 이상이 생기고 학습 능력도 떨어졌다는 것
 - **[사용중지 요청]** 유럽연합(EU), 일부 곡물에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 사용 3년간 임시로 사용 중지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했지만 영국은 거부
- 자료 : 국민일보(2014.6.25.)

☞ 농정이슈

<식량안보의 개념 변화>

- **[식량안보 개념 도입]**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식량안보 개념은 **1974년 세계 식량 정상회의에서 처음 공식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
 - ※ 그 당시 방글라데시를 휩쓴 기근으로 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한데 기인
- **[식량안보 개념 변화]** 식량 생산가격 변동성 축소 → 고영양 식량 안정적 공급으로 변화
 - ※ (한국) 식량의 해외 의존과 관련해 주로 사용,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면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반면 (국제기구) 식량의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
- **(식량 생산가격 변동성 축소, 1974년)** 적절한 수준의 식량이 생산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식량 소비를 유지, 생산과 가격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 모든 국가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이들 국가에 식량이 공급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식량이 생산되어야 한다는 인식
- **(고영양 식량 안정적 공급, 1996년)** 세계 식량 정상회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이 충분히 공급됐을 때 식량안보가 존재한다고 규정
 - ※ 현재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채택한 개념, 식량의 자급자족과 같은 생산적 측면 강조하기보다 개인·가족이 안정적인 식량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강조

자료 : 한국경제(2014.6.21.)

☐ 중국 쓰촨성 피현 정부, 한국 새마을운동 모델 적극 도입

- [KOTRA, ‘한-중 농업 현대화 교류회’ 개최, 6.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 쓰촨성 성도인 청두에서 현급 도시인 피현 정부 요청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해 강연
 - **(중국 쓰촨성 피현 정부, 한국 새마을운동 도입 지원 요청)** 우빈 피현 부현장, “우리의 최대 과제는 도시 농업 발전을 통한 농촌 현대화 구축,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전수 위해 적극 지원” 요청
 - ※ 중국의 전형적인 농촌 도시인 피현은 새마을운동 접목해 주민소득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생태전원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

자료 : 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환경미디어(2014.6.21.)

☞ 농정이슈

☐ 농산물 상생마케팅, 농산물 소비촉진·수급안정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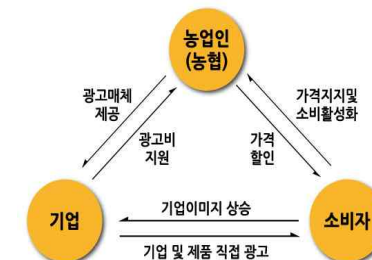
- **[농협, 상생마케팅* 추진(2013.11월~),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 국내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및 소비자 물가안정 위해 농산물 상생마케팅 추진
 - ※ (6월 현재) 29개 기업 참여, 약 21억 원 유치

<상생마케팅이란?>

- (정의) 농산물 포장지에 기업의 광고를 부착하여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싼 값에 구입하며, 기업은 相生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생산자-소비자-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
 - 농산물 포장지를 광고판으로 활용해 기업이 내는 광고비만큼 농산물 가격을 깎아주는 것이 핵심
 - ※ 예시: ○○기업으로부터 7,000만 원 받은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그 광고비로 소비자에게 배추 2개 값으로 3개 제공하는 '2+1' 행사하고, 포장물 겹면에 '○○기업이 1개를 더 드립니다'란 스티커 부착해 해당 기업이미지 제고
- (공급방식) 상생마케팅 스티커가 부착된 농산물을 전국의 농협 하나로클럽 판매장과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중소슈퍼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
- (장점) 지역별·품목별 맞춤 광고, 기업들의 새로운 홍보수단

- **(대상품목)** 후원기업과 협의하여 가격 등락 심한 배추·양파·마늘·감자·감·귤·잡곡 등 소비자 민감품목 중에서 선정, 행사방법은 가격인하, 1+1 덤행사
- **[1석4조 효과]** (농가) 판로 확대, (소비자) 가격 인하, (해당기업) 홍보효과 제고, (시장전체) 농산물 가격 안정

■ 상생마케팅 구조 ■



자료 : 세계일보(2014.6.23.) / 내일신문NEWSis·한국경제(2014.6.24.) / 농민신문(2014.6.25.)

☐ 2014년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비과세 감면 제도

- **[정부, 국제 관련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2014년 말 종료되는 제도 **원칙적**으로 종료, 신규 제도 도입 최대한 억제할 방침, 이를 통해 2015년까지 3조 원 세원 마련, **농업관련 세제개혁 연장 여부 농업계 관심**

농정이슈

2014년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비과세 감면 제도

제도	〈감면액, 2013년 기준〉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102억 원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 순이익 과세특례	• 2,274억 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장려금 비과세	• 119억 원
• 농축암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1조 3,729억 원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44억 원

- **[윤명희 의원 - 농업분야 국지방세 비과세 항목 연장 촉구]** 2014년 종료되는 농업분야 국지방세 비과세 항목(22건) 연장 촉구(6.19일)
 - **(이유)** 농축산물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
 - ※ (농업단체) 농업의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농업 관련 세금 증가는 경쟁력 강화 위한 투자 더욱 위축시키며, 특히 농협에 대한 세제지원 중단은 농업·농촌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도농 소득격차 심화

자료 : 농민신문·원예산업신문(2014.6.25.)

양파 공급과잉 문제 해결 위해 지원 확대

- **[양파가격 폭락]** 공급과잉으로 양파가격 폭락*에 갈아엎거나 폐기, 농민들 정부에 대책** 마련 호소
 - ※ 양파 도매가격(1kg): (14.4월) 636원 → (5월) 617 → (6월) 508,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488원, 1,725원, 9,47원에 견줘 25.5~53.6%에 불과한 수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자료)
 - ※ ※ 비축·수매 물량 확대, 최저 생산비 인상, 수출량 확대 등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양파 수출물류비 지원 2배 확대]** 국내 양파 공급과잉 문제 해결 위해 수출물류비 (기존) 8% → (확대) **16% 지원*** 및 산지농협 등 생산자 단체들과 협력하여 **생산현장에서도 수출지원** 노력
 - ※ 대만, 홍콩 등 일부 지역으로 수출 가능 전망
- **[농협, 계약재배사업 물량 확대]** 농업인 어려움 해소 위해 2014년 양파 계약재배사업 물량 **전년대비 29% 증가**한 28만5,000톤 수매
 - ※ 수출추진, 직거래장터, 소비촉진 홍보, 특판행사 통해 수요 확대에 노력
- **[aT, 마늘·양파 수급 안정 위해 93억 원 지원]**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마늘·양파 수급안정과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위해 주요 영농조합법인 등 25개 업체 선정*, 지원 대상 확정
 - ※ 농가나 작목반 등과 파종시기에 수매약정하고 내년 출하시기에 마늘, 양파 수매계획 있는 법인, 이번 자금 지원으로 마늘 6,000톤, 양파 3만4,000톤 계약재배 예상

농정이슈

- **[농식품부-농협, 범국민적 양파 소비촉진 운동 전개]** 작황호조로 인한 생산량 증가 및 최근 소비문화에 따른 양파 수급 및 가격 불안정 해소 위해 양파 전국 직거래 장터 추진, 매스컴 홍보 및 국산 농산물 판촉행사 진행
 - **(약 200개소 양파 직거래 장터 개장)** ‘온 국민 양파 팔아주는 날’ (6.27일) 정하고, 전국 16개 농협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약 200개소에서 6.27(금)~28(토)까지 진행
 - ※ 시중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 **(「양파 성출하기 특판행사」 진행)** 전국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및 하나로마트 157개소에서 6.26일~7.6일까지 진행
 -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 실천지침 제작)** MOU*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6.24일), 정부·협회 간 농산물 가격·수급동향 정보 공유,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실천지침 제작할 계획
 - ※ 국산 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 확대 위해 「대한영양사협회」 및 「어린이집총연합회」와 업무협약(MOU) 체결(6.10일)하여 체계적인 소비촉진 시스템 마련
- 자료 : MBN·일간투데이(2014.6.21.) / 한겨레(2014.6.24.) / 원예산업신문·한국일보(2014.6.25.) / NEWSis·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뉴스투데이(2014.6.26.) / YTN·농축유통신문·한국농업신문(2014.6.27.)
-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농협, 범국민적 양파 소비촉진 운동 전개 - 농협 직거래 매장 등 200개소 양파 할인판매 -」(2014.6.25.)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마련 촉구>

- **[국회의원-한국농수산연합회,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6.20일]** 배추·양파 등 농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폭락한 것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농민들도 농산물 가격 안정 호소*
 -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6.20일) △양파·마늘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최저보장가격 현실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 제정 주문
 -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6.19일) 수매량 확대 및 수매가격 현실화 촉구
 - ※ (전남도청) 마늘·양파 가격안정 위해 정부 비축수매 조기 실시와 수매량 확대, 수매가격 현실화, 해당 주산지 시·군이 조성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50%를 국비에서 지원 농식품부에 건의
- **(주요 요구안)** 농산물 가격 안정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출하조절, 비축, 폐기, 소비촉진)을 통한 지속적·다각적 대책 마련

자료 : NEWSis·테일리안·시사뉴스·연합뉴스·파이낸셜투데이(2014.6.21.)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4.6.23.) / 한국농업신문(2014.6.27.)

□ 농식품부, 전통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3·4호 지정

- **[농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제3호 ‘구례 산수유농업’, 제4호 ‘담양 대나무밭’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 ※ 전국 시·군에서 신청한 18건의 유산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거쳐 농업유산심의회에서 최종 결정(6.10일)
 - ※ 제1호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제2호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2013년 지정)
- **(구례 산수유농업)** 농경지와 마을 주변에 산수유를 재배하여 마을과 산수유가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 형성
 - ※ (구례군 산수유 생산량) 114톤, 전국 생산량의 53% 수준('12년 기준)
- **(담양 대나무밭)** 주변에 대나무 밭을 조성하여 수려한 경관 자랑, 이를 농기구, 생활용품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
- **[지원내용]** 농업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에 필요한 예산 지원(지역 당 3년간 10.5억 원)

자료 : KBS(2014.6.25.) / 경향신문·뉴스와이어·NEWSis·아시아경제·아시아일보·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데일리·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2014.6.26.) / 농민신문·중앙일보(2014.6.27.)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 전통 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2014.6.26.)

□ 경기 안성 육용오리 농가에서 AI(H5N8형) 발생

- **[경기 안성 소재 농가의 육용오리 AI(H5N8형) 판명]** 6.25일 검사 의뢰된 경기 안성 소재 농가의 육용오리에 대한 AI에 대한 검사 결과, H5N8형으로 판명
 - **(살처분 현황)** 해당 농장 내 육용오리 2,294수(8일령) 살처분(반경 500m 이내 가금 사육농가 없음), 이동제한, 역학조사반 파견 방역 조치
- **[향후계획]** 고병원성 AI가 일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가금 농가 대상으로 일제 방역실태 점검 실시

자료 : KBS·SBS·YT(2014.6.25.) / 국민일보·news1·NEWSis·세계일보·아시아경제·연합뉴스·한국경제(2014.6.26.)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경기 안성 소재 육용오리 AI(H5N8형) 판명」(2014.6.25.)

정책브리핑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절차 간소화

자료 : 국토교통부(2014.6.25.) / 농림축산식품부(2014.6.27.)

□ 국토교통부, 2014년 하반기 규제완화 계획 발표(6.25일)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주민 소득 증대 도모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 (현행) 30여종 → **(계획) 90** 여종 대폭 확대
 - ※ (일부 용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 가능)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큰 일부 용도만 제외
- **(제도 개선 제외대상)**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관장 등 신축 허용되는 시설***, 건축물 허가 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 우려**
 - ※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변경 확대 허용
-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현행) 주민 생활유자·소득 증대 위해 축사, 버섯재배사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 일괄적 규정 → **(계획)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 ※ 축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사육장,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퇴비사 및 발효 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
-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 버섯 재배사, 온실의 규모 확대·축소 가능, 축사 신축도 불허 가능**해 의도적으로 신축 허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 사전 차단
-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에게만 허용 → **(계획) 농림수산업 종사자라면 설치**
- **[기타]**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허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 ※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 허용

☞ 정책브리핑

※ ※ (현행)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 납부기한 1개월 이내 → (계획)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납부기한 6개월 연장

■ 규제 개선 추진 계획 ■

규제 완화 과제	개정 대상	일정
•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확대	시행령	입법예고(7월) / 시행(12월)
•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시행령	
•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설치 허용	시행령	
• 보전부담금 납부제도 개선	법	국회제출(8월)
• 농림수산물 임시가설물 설치자격 완화	시행령	입법예고(7월) / 시행(12월)
•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시행령	
• 도사군 계획시설 설치 절차간소화	지침	행정예고(7월) / 시행(10월)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개정(6.27일)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식품부 훈령) 개정, 6.27일] 농업진흥지역 효율적 관리 위해 「농지법시행령」 개정(2013.12월), 후속조치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개정
- [주요내용] 농업진흥지역(2013년 말 현재 1,032천ha)에서 각종 개발계획 수립·변경할 때 절차 간소화,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 명확화
 - (행정절차 간소화, 업무의 신속성 도모)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한 지역에서 면적 감소 혹은 총면적 1만㎡ 미만 증가될 경우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 명확, 국민들 불편 해소) 여건변화 요건*에 도로·철도 외에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포함, 완전히 분리된 자투리지역(2만㎡ 미만)은 별도 심사 없이 해제 가능
 - ※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중 하나
- [기대효과] 시도지사 권한 확대, 신속한 업무 처리 ⇒ 투자촉진 등 농촌경제에 활력 증진 도모
- [향후계획] 이번 조치와 별도*로 국민 경제 활성화 및 농촌소득 창출에 필요한 방향으로 농업진흥지역 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 ※ 농지 규제 전반에 대한 국민 불편 의견 적극 수렴, 농지전문가로 구성된 ‘농지포럼’에서 논의

☞ 정책브리핑

농식품부, 자연재해 복구지원 확대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시행

-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하위규정 개정·시행(6.25일~)]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농가의 부담 경감 및 예방 위주의 재해대책 추진
- [복구의무 폐지] (개정 전) 복구자금 선지급 받은 농가는 30일 이내 복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 반납 → (개정 후)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지원 및 미정산, 피해 입은 농가 부담 완화
- [정전 2차 피해 지원]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대비하였음에도 재해로 인하여 자가발전기의 미작동으로 인한 이차적(二次的) 피해 발생한 경우도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지원
- [재해예방 시설·장비 지원] (개정 전)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사후지원에 치중 → (개정 후) 재해예방 시설 설치 촉진 위해 지하수 이용시설, 방풍림 등을 재해 예방 시설로 정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폐사한 동물사체 매장] (개정 전)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 등 동물 사체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 → (개정 후) 신속한 폐기물 처리 위해 일정 규모(가축 1톤/1일, 수산동물 3톤) 이상 발생 시 「폐기물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매장 가능
- [향후계획] 재해발생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 지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6.25.)

농식품부·KT, 가축전염병 확산 대응 위한 MOU 체결

□ 개요

- **[농식품부·KT 업무협약(MOU) 체결, 6.25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방역 대응**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
 - ※ (농식품부) 가축질병 방역, (KT) ICT 역량 집중 ⇒ AI확산 방지에 기여
- **(농식품부)**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3.0을 통해 창조적인 농정 실현 적극 추진
- **(KT)** AI 확산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향후에도 국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례 발굴하여 공공이익 및 창조경제에 기여
- **[기대효과]** 빅데이터를 통한 AI확산 예측 통해 국가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 빅데이터 활용한 분석 통해 공공 이익 극대화, 경제적 피해 최소화 기대

□ 주요내용

- **[AI 확산 대응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KT) 기지국 통계 데이터, (농식품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데이터를 융합해 사람·차량의 이동과 AI 확산과의 연관관계 분석, 선제적 방역이 시급한 지역 예측

〈주요내용〉

- 사람·차량의 이동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의 연관관계 분석
- AI 확산 경로 규명 및 사전 방역을 위한 발병 예상지역 선정
- 사람·차량 이동과 AI 확산 간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한 확산 예측 모델 개발
- AI 확산 분석에 기반한 타 가축 전염병 확대 적용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 등 대상 분야 정하고 구체적인 협업 추진 위해 양 기관 공동 연구 진행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 가축질병 발생의 사전 예방 및 질병 발생 시 확산 방지 위해 최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동물질병 및 가축방역 정보 통합 관리**
 - ※ 주사용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민간 방역담당자 약 3만 명
- **(향후계획)** 재난형 질병(AI, 구제역)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 위해 정보 정확도 제고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6.26.)

농식품부·산림청 협업 통해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 개요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추진]** 농식품부, 산림청과 협업 통해 산지에서 가축사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산지를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 사육과 환경 친화적 축산물 생산으로 관광·체험 등을 접목한 6차 산업형 축산을 의미

□ 주요내용

- **[농식품부 - 초지법령 개정]** △초지의 부대시설에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 추가, △초지 조성을 위한 국유지·공유지 대부료율 운영주체 변경* 추진 중
 - ※ (현행) 대통령령 → (개정) 국유지<대통령령>, 공유지<지자체 조례>
- **[산림청 -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농림어업인 등에 가축방목 허용면적 확대 (3만㎡ → 5만㎡), △가축방목 일시사용신고 (현재) 준보전산지 → (개정)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입엽용산지까지 확대
 - ※ 입법예고 완료(2014.5.15.)
- **[향후계획]**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속적으로 발굴, 부처 간 협업 통해 제도개선 적극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6.25.)

연구지원 2014년산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자료 : 통계청(2014.6.26.)

개요

- **[조사목적]** 농산물수급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
 - ※ (조사기간 및 방법) 2014.5.16~30일(15일간) / 현지 방문하여 실측·목측 조사
- **[조사대상]**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약 24,600개소
 - ※ 공통표본 약 21,600개, 주산지표본(맥류, 봄감자, 사과, 배) 약 3,000개

2014년산 작물별 재배면적

- **[2014년산 보리 재배면적] 37,669ha, 전년(33,064ha)대비 13.9% ↑**
 - ※ 보리 재배면적: ('11) 42,098ha → ('12) 30,667 → ('13) 33,064 → ('14) 37,669
 - **(원 인)** 농협의 계약단가 인상, 계약재배
 - ※ (재배면적 증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재배면적 감소) 밀
- **[2014년산 겉보리 재배면적] 7,974ha, 전년(7,540ha)대비 5.8% ↑**
 - **(원 인)** 농협의 겉보리 계약단가 인상, 가공식품(보리차 등) 업체와의 계약재배로 인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 ※ 겉보리 농협 계약단가(농협중앙회, 겉보리 1등급, 40kg, 원): ('12년산) 27,600 → ('13년산) 34,000 → ('14년산) 38,000(11.8% ↑)
 - **(시도별)** 전북(3,662ha) > 경남(2,743ha) > 경북(813ha) > 대구(362ha) 순
 - ※ (상위 4개 시도 면적) 전국의 95.1% 차지
- **[2014년산 쌀보리 재배면적] 16,783ha, 전년(13,654ha)대비 22.9% ↑**
 - **(원 인)** 농협의 쌀보리 계약단가 인상, 월동작물 재배농가의 쌀보리 전환
 - ※ 쌀보리 농협 계약단가(농협중앙회, 1등급, 40kg, 원): ('12년산) 27,320 → ('13년산) 34,000 → ('14년산) 38,000(11.8% ↑)
 - **(시도별)** 전북(7,902ha) > 전남(7,116ha) > 경남(790ha) > 제주(555ha) 순
 - ※ (상위 4개 시도 면적) 전국의 97.5% 차지

- **[2014년산 맥주보리 재배면적] 5,732ha, 전년(4,497ha)대비 27.5% ↑**
 - **(원 인)** 농협의 맥주보리 계약단가 인상과 계약재배, 수요처 다변화(혼합 곡식 등), 보리외의 대체작물 부재
 - ※ 맥주보리 농협 계약단가(농협중앙회, 1등급, 40kg, 원): ('12년산) 30,760 → ('13년산) 36,000 → ('14년산) 38,000(5.6% ↑)
 - **(시도별)** 전남(4,313ha) > 경남(765ha) > 제주(654ha) 순
 - ※ (상위 3개 시도 면적) 전국의 100% 차지
- **[2014년산 밀 재배면적] 7,180ha, 전년(7,373ha)대비 2.6% ↓**
 - **(원 인)** 밀은 다른 보리에 비해 수확이 늦어 벼의 이모작에 지장이 생기는데 따른 작물전환
 - ※ 밀 수매가격(한국우리밀농협, 1등급, 40kg, 원): ('12년산) 36,000 → ('13년산) 36,000 → ('14년산) 42,000(16.7% ↑)
 - **(시도별)** 전남(2,643ha) > 전북(1,785ha) > 경남(1,521ha) > 광주(950ha) 순
 - ※ (상위 4개 시도 면적) 전국의 96.1% 차지
- **[2014년산 봄감자 재배면적] 15,596ha, 전년(20,977ha)대비 25.7% ↓**
 - ※ 봄감자 재배면적: ('11) 19,126ha → ('12) 17,424 → ('13) 20,977 → ('14) 15,596
 - **(원 인)** 전년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폭락
 - **(시도별)** 경북(2,965ha) > 충남(2,329ha) > 전남(2,226ha) > 강원(1,802ha) 순
 - ※ (상위 4개 시도 면적) 전국의 59.8% 차지
- **[2014년산 사과 재배면적] 30,702ha, 전년(30,449ha)대비 0.8% ↑**
 - ※ 사과 재배면적: ('11) 31,167ha → ('12) 30,734 → ('13) 30,449 → ('14) 30,702
 - **(원 인)** 최근 사과 가격의 호조, 지자체의 지원
 - ※ 지구 온난화 영향에 따라 재배지역이 전북, 경남 산간으로 이동하면서 신규 식재 증가
 - **(시도별)** 경북(18,811ha) > 충북(3,877ha) > 경남(3,370ha) > 전북(2,078ha) 순
 - ※ (상위 4개 시도 면적) 전국의 91.6% 차지
- **[2014년산 배 재배면적] 13,127ha, 전년(13,740ha)대비 4.5% ↓**
 - ※ 배 재배면적: ('11) 15,081ha → ('12) 14,353 → ('13) 13,740 → ('14) 13,127
 - **(원 인)** 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유희지 전환, 노후화된 과수의 폐원, 다른 과수(복숭아 등)로의 전환
 - ※ 배의 주산지가 도시근교로 인해 개발용지 편입 증가
 - **(시도별)** 전남(3,457ha) > 경기(2,577ha) > 충남(2,389ha) > 경북(1,536ha) 순
 - ※ (상위 4개 시도 면적) 전국의 75.9% 차지

소비자가구의 농식품 소비패턴조사 결과

개요

- [농진청, 농식품 소비패턴조사 결과 발표*, 6.19일] ‘과일 구매 직거래’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인 것으로 조사
 - ※ (조사대상) 서울·인천·경기거주 소비자 패널 가구(732가구) 자료
 - ※ (조사기간) '09.12월~'13.11월, 정부3.0 강화 차원에서 임산물과 수산물 포함하여 분석
- (소비자 12.6%↑, 농업인 30.3~35.9%↑) (소비자) 과일 구입 시 직거래가 유통업체 보다 12.6% 저렴하고, (농업인) 직거래 판매했을 때 수익 30.3~35.9% 증가

〈소비자 직거래란?〉

• (정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직접 거래(네이버 사전)하는 것으로, 산지 직판, 전화주문, 인터넷 구매를 포함함. 다만 대형마트 쇼핑물은 농가의 입점이 아닌 유통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제외

주요내용

- [2013년 소비자 월 평균 농식품 구입액] 386,705원, 2010년(360,154원) 대비 7.4%↑
 - ※ 신선식품 6.7%↑, 가공식품 8.5%↑
- (부류별) 2010년 대비 2013년 곡류·육류·유제품 구입액 비율은 증가, 채소류·수산물은 감소
- [농식품 구입처별 구입액 비율] 2010년 대비 2013년 대형마트·전통시장·백화점은 감소한 반면, 무점포·전문점·기업형슈퍼는 증가
 - ※ (감소) 대형마트: 24.6% → 23.3, 전통시장: 16.3 → 11.7 / (증가) 무점포: 5.7% → 9.3, 전문점(유기농 매장 포함): 9.0 → 13.3
- (부류별) 직거래를 포함한 무점포 판매 품목 중 곡류·채소류·과일류는 증가한 반면, 육류·수산물·가공식품은 기업형슈퍼가 증가
 - ※ (무점포 판매 농식품 품목별 변동 경향, 2010 → 2013, %) 곡류: 15.7 → 25.6, 채소류: 8.1 → 15.0, 과일(과채)류: 9.4 → 16.7
 - ※ (기업형 슈퍼 품목별 변동 경향, 2010 → 2013, %) 육류: 20.25 → 21.52, 수산물: 14.55 → 15.14, 가공식품: 19.7 → 21.9

농식품 구입처별 구입액 비율 추이

단위: 비중, %

구분	구입처								합계
	대형마트	전통시장	기업형슈퍼	소형슈퍼	전문점	무점포판매	백화점	기타	
평균	24.63	13.30	19.16	17.07	11.63	7.95	2.14	4.04	100.00
2010	24.60	16.34	18.49	17.79	8.96	5.74	2.43	5.57	100.00
2011	25.82	12.97	17.74	17.86	11.65	7.36	2.35	4.10	100.00
2012	24.86	12.37	20.36	16.22	12.45	9.29	1.82	2.68	100.00
2013	23.30	11.67	20.02	16.44	13.32	9.32	1.96	3.85	100.00

- [무점포판매 유형별 과일 비율, 2013, %] 점포 없이 직거래(74.8%, 직판, 인터넷) > 노점(20.8%) > TV홈쇼핑(3.4%) > 대형마트쇼핑몰(1.0%) 순
- [과일* 구입처별 구입액 비율**] 2010년 대비 2013년에 대형마트는 감소한 반면, 직거래는 크게 증가
 -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감
 - ※※ (감소) 대형 마트 13.9% → 12.8, 1.1%p↓ / (증가) 직거래 9.3 → 15.7, 6.4%p↑
- [사과의 구입처별 구입액 비율, 평균(2010-2013)] 무점포(20.3%)* > 전통시장(19.9%) > 기업형슈퍼(14.8%) > 소형슈퍼(14.0%) > 대형마트(13.0%) 순, 직거래를 포함한 무점포 시장이 가장 높은 비율
 - ※ ('10) 14.5% → ('11) 17.6 → ('12) 21.9 → ('13) 27.1
- (계절별) 명절 선물을 택배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명절 산지 직거래 구입액 해마다 증가세
 - ※ ('12.1월) 1.5% → ('13.2월) 4.1, ('12.9월) 2.8% → ('13.9월) 2.9
- [직거래 선호하는 가구의 특징] 다른 유통 경로 구매 가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득이 높고, 40대 연령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 (직거래 증가 이유) '직거래 선호가구의 특징이 식품 구매 시 품질보다 가격을 고려' 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보면 상품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직거래 선호, 쇼핑 시간 감소, 이동비용 절감 효과
- (직거래 시장 성장 지속) 식품 구입 시 가격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소비 특징을 고려할 때 인터넷 수수료와 물류비용 줄어든다면 직거래 시장의 지속적 성장 기대

자료 : 농촌진흥청(2014.6.20.)

2014년 5월 농축산물 수입가격 동향

농산물 수입가격 동향

- **[곡물류]** 전월대비 강낭콩·커피(생두) 제외한 곡물류 하락
 - ※ 전년 동월대비 팥·강낭콩·커피(생두)↑, 옥수수·밀·커피(원두)↓
 - **(강낭콩, 커피_생두)** 전월대비 각각 10.0%↑·14.0%↑
 - **(옥수수, 팥콘용·사료용·기타)** 전월대비 각각 4.2%↓·0.2%↓·0.6%↓
 - **(커피_원두, 제분용 밀)** 전월대비 각각 2.6%↓·0.4%↓
- **[과일류]** 전월대비 키위·레몬·바나나 제외한 포도·오렌지·파인애플 하락
 - ※ 전년 동월대비 키위·레몬·오렌지↑, 포도·바나나·파인애플↓
 - **(키위·레몬·바나나)** 전월대비 각각 28.1%↑·2.4%↑·0.6%↑
 - **(포도·오렌지·파인애플)** 전월대비 각각 9.9%↓·5.3%↓·3.1%↓
- **[양념채소류]** 전월대비 고추(건조)·마늘(냉동)·양파(냉동) 제외한 생강·양파(냉장)·고추류(냉동) 하락
 - ※ 전년 동월대비 고추↑, 마늘(냉동)·양파·생강↓
 - **(고추_건조, 마늘·양파_냉동)** 전월대비 각각 4.8%↑·2.7%↑·1.3%↑
 - **(생강·양파_냉장)** 전월대비 각각 19.1%↓·5.4%↓
 - **(고추_냉동)** 전월대비 1.3%↓
- **[일반채소류]** 전월대비 고사리(건조) 제외한 주요 채소류 하락
 - ※ 전년 동월대비 무(냉장)·호박↑, 양배추·도라지·당근·고사리↓
 - **(호박)** 전월대비 보합
 - **(고사리_무_건조)** 전월대비 각각 3.4%↑·4.6%↓
 - **(양배추·도라지·표고버섯·당근)** 전월대비 각각 44.2%↓·3.1%↓·0.8%↓·0.3%↓
- **[견과류]** 전월대비 아몬드 제외한 주요 견과류 모두 하락
 - ※ 전년 동월대비 아몬드↑, 밤·호두↓
 - **(아몬드)** 전월대비 보합
 - **(밤_건조·냉동, 호두)** 전월대비 각각 4.1%↓·0.4%↓·1.8%↓

- **[가공제품]** 전월대비 가공제품 모두 하락
 - ※ 전년 동월대비 두부·김치·밀가루·설탕↓
 - **(두부·김치·밀가루·설탕)** 전월대비 각각 29.2%↓·9.2%↓·1.7%↓·1.0%↓

축산물 수입가격 동향

- **[소고·돼지고기·닭고기]** 전월대비 닭고기 제외한 소고·돼지고기 하락
 - ※ 전년 동월대비 소고기↑, 돼지고기·닭고기↓
 - **(닭고기)** 전월대비 3.0%↑
 - **(소고·돼지고기)** 전월대비 각각 0.5%↓·0.4%↓

주요 육류 수입가격 동향

품 목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2014.2월	3월	4월	5월	2014.2월	3월	4월	5월
소 고 기	△5.6	2.4	△0.6	△0.5	4.6	4.8	2.5	1.5
소갈비(냉장)	8.3	△10.5	△0.7	△4.4	32.3	28.1	23.4	16.9
소갈비(냉동)	△21.0	17.6	△1.5	△3.7	5.2	20.8	22.4	17.1
뼈없는소고기(냉장)	6.5	△5.4	0.0	△2.2	5.8	△3.3	△9.0	△8.5
뼈없는소고기(냉동)	0.0	△4.1	1.1	△0.2	2.1	△1.9	△2.3	△4.0
돼 지 고 기	3.1	2.3	△0.9	△0.4	2.3	0.8	△2.1	△4.2
삼겹살(냉동)	1.5	1.6	△0.4	△2.3	△6.9	△7.6	△8.1	△10.1
기타(냉동·돼지)	4.5	△1.2	1.7	2.0	5.2	△1.0	1.5	4.1
닭 고 기	1.9	0.8	△9.6	3.0	△6.1	△5.8	△15.9	△10.9
닭가슴(냉동)	9.6	△3.0	△4.7	8.1	19.4	10.9	△2.3	2.7
닭날개(냉동)	3.5	0.4	0.0	△4.5	3.0	0.4	△1.2	△4.2
닭다리(냉동)	2.4	0.7	△10.1	3.1	△7.3	△6.5	△17.0	△11.5

- **[가공제품]** 전월대비 치즈(모차렐라) 제외한 소시지·버터 하락
 - ※ 전년 동월대비 치즈(모차렐라)·소시지·버터↑
 - **(모차렐라치즈)** 전월대비 0.4%↑
 - **(소시지·버터)** 전월대비 각각 3.3%↓·2.0%↓

자료 : 관세청(2014.6.24.)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